

[한국 교육산업 대해부⑥ 끝]

교육서비스 국제수지 적자 분석

2009.11.12 | 김일영_새사연 정치사회연구센터장 | kiy@saesayon.org

목 차

1. 위법을 두려워하지 않은 조기유학
2. 초등이 주도하고 중고등은 장기화 추세
3. 대학붕괴와 고등교육 유학
4. 대학교육 개혁 없이 교육서비스 흑자 불가능



<http://saesayon.org>

신문지상에서 부자들의 극성으로 치부되던 조기유학이 이제는 지상과 방송에서 연예인 기러기 아빠들을 통해 마치 이웃의 이야기처럼 익숙해졌다. 조기유학 뿐 아니라 청년실업이 심각한 요즘 청년들에게 어학연수는 취업을 위한 필수과정이 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7년에 유학연수로 벌어들인 돈은 4490만 달러에 불과한데, 쓴 돈은 50억 2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략 원화 5조 9445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적자 폭은 2001년에 비해 4.7배나 증가했다.

1. 위법을 두려워하지 않은 조기유학

해외유학은 6개월 이상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것으로 고등교육 과정의 일반유학과 그 전에 가는 조기유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기 유학은 파견동행, 해외이주 등 가족이 모두 가는 경우와 정부가 예체능 등 특정분야에 한정해 승인하는 인정유학이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전에는 모두 위법이었던 ‘미인정유학’으로 자비를 들여 고졸미만의 학력소지자가 유학을 가는 것이다. 2000년에 규제가 완화되어 중학교만 졸업하면 자비유학이 인정되어 ‘미인정유학’의 범위는 줄어들었다. 2007년만 하더라도 전체 출국학생 중 50퍼센트가 ‘미인정유학’이었다. 말이 위법이지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로 복귀할 경우 수입일수 불인정 등 불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 사실 사문화되었다고 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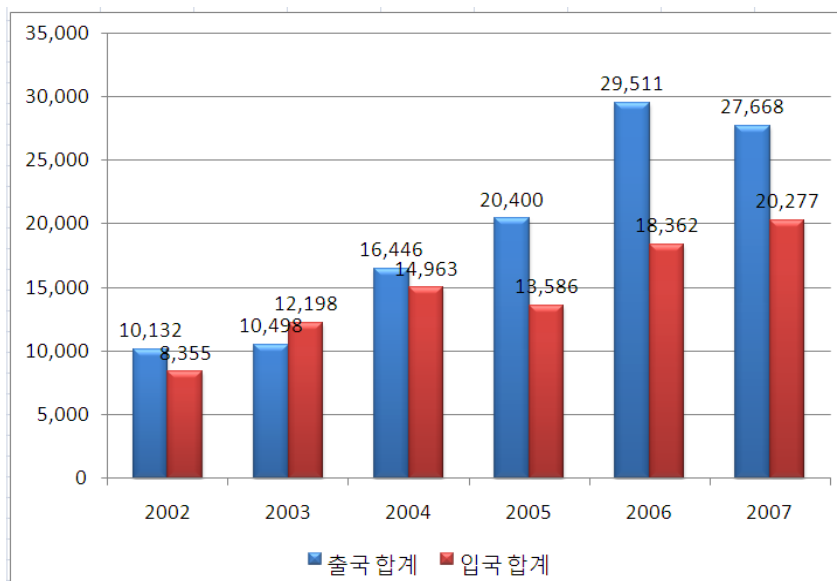
표 1 . 조기 유학의 종류
(2007, 국제교육진흥원)

구분	내용
인정유학	자연과학, 예체능 등의 분야에서 특수한 업적을 이룬 자, 특수교육대상자 등으로서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수는 매우 적다.
자비유학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지닌 학생이 자비로 유학을 가는 경우
파견동행	부모가 직장에서 해외파견 등의 이유로 인해 자녀가 어쩔 수 없이 유학을 가는 것으로 부모 모두 동행하는 경우
해외이주	가족전체가 이민을 가는 경우
미인정유학	유학을 가는 초·중학생으로서 위에서 제시한 인정유학, 해외이주, 파견동행의 3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유학을 가는 경우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미인정 유학임. 파견동행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국내에 남으면 불법이 된다.

2. 초등이 주도하고 중고등은 장기화 추세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을 통해 조사한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초·중·고등학생들의 출입국 현황을 보면 출국은 2006년 2만 9511명으로 정점을 보인 후 잠시 주춤한 상태이고, 입국은 2007년 2만 277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동기간 동안 출국 후 입국하지 않고 외국 체류 중인 조기유학생은 2만 6914명으로 전체 유학생 수의 10퍼센트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림 1 . 조기유학 출입국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2008)



조기 유학의 특징은 3가지로 요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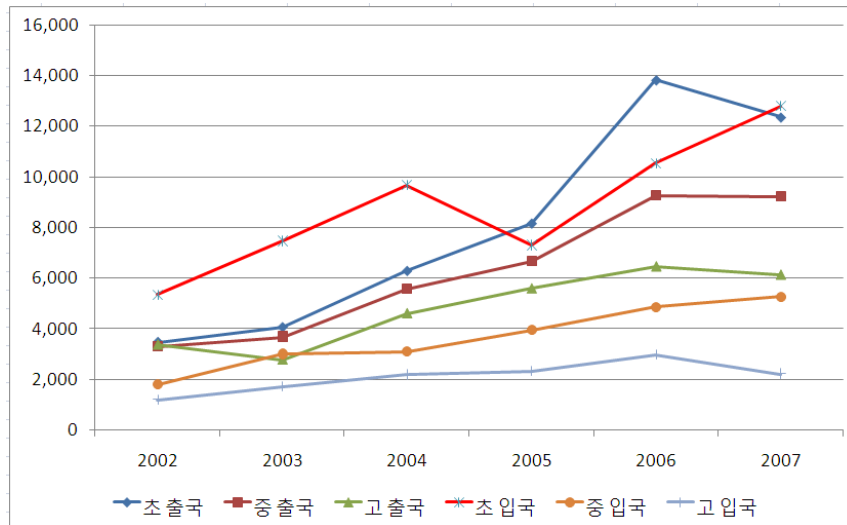
첫째, 출국하는 학생들의 증가속도가 초등학생이 4배, 중학생은 3배, 고등학생은 2배씩 증가하여 출국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둘째,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출국자와 입국자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데,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유학이 장기화되고 있다.

셋째, 2003년과 2004년 초등학생 입국자의 수가 늘어난 것은 카드대란과 같은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출국과 입국의 장기증가 추세는 둘 다 뚜렷해서 초등학생들의 유학은 단기적인 형태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연도별, 학급별 출입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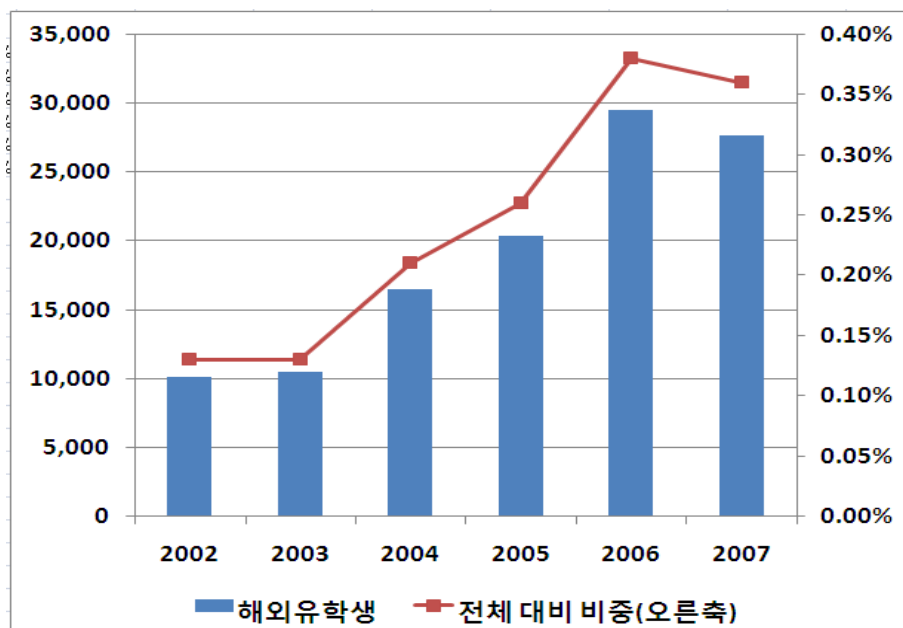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 2008, 재구성)



파견동행이나 해외이주를 제외한 순수해외유학의 경우 5년 간 3배 이상 증가했지만, 한 해에 출국하는 순수유학생은 전체 학생 1000명당 3명~4명 수준이다. 그럼에도 서울·경기 특정지역의 경우 초중등학생 중 4명당 1명꼴로 유학연수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에 대한 언론보도도 있다(<동아일보> 2009.5.18).

그림 3. 순수 초중고 유학생 증감 추이와 전체 학생대비 비중

(한국교육개발원, 2008, 재구성)



3. 대학붕괴와 고등교육 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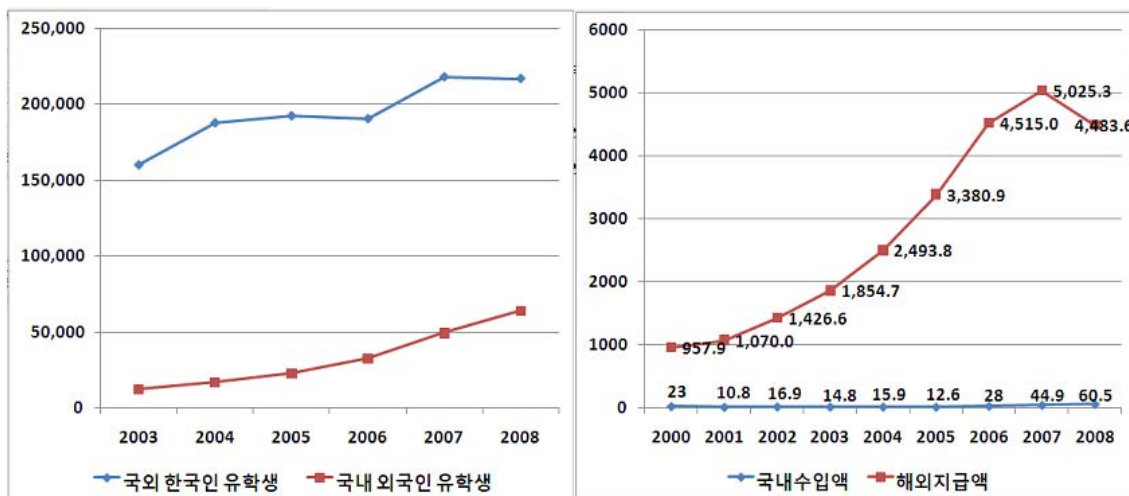
한 민간단체가 조사한 기러기 아빠들의 소득, 직업, 송금액, 유학비용 사용처 등에 설문조사 결과를 잠시 소개한다(출처: 국제교육진흥원, 2007, 조기유학바로알기). 기러기 아빠들의 직업은 교수가 28퍼센트, 사업가가 27퍼센트로 이 둘을 합치면 전체의 절반이 넘었고, 소득은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가 32퍼센트,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가 26퍼센트로 또한 절반이 넘었다. 평균적으로 매월 300~500만 원 정도를 송금하고 있는 데, 소득보다 많은 돈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300만 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는 50퍼센트가, 500만 원 미만은 19.2퍼센트, 700만 원 미만의 소득자의 경우에도 12.5퍼센트나 됐다. 유학비는 학비가 다소 높은 비중을 보이지만 생활비와 주택비로 각각 3분의 1정도씩 사용된 반면, 사교육비로는 3퍼센트만 사용되었다.

국내에서의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유학비가 충당될 것이라는 추측도 있지만, 과도한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 두 집 살림으로 생활비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고, 환율변동과 낮은 곳에서의 적응력 취약 등을 고려하면 조기유학은 아직까지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유학을 가는 이유는 당사자들마다 다양하다. 평준화교육을 문제 삼기도 하고, 경쟁교육을 이유로 드는 경우도 있다. 국내 대학 입학이 목적인 경우도 있고, 아예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경우도 있다. 이를 다 포괄하는 원인을 말하긴 어렵지만, 한국 사회의 학력서열화가 심해지면서 너무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또 한편으로는 진로 선택권을 제한받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대학은 늘어난 대학정원을 채우기도 힘들어 하는 데, 정작 외국유학의 길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늘고 있다. 그 규모는 2008년 현재 7년 전보다 6만 6934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1만 명의 학생정원을 가지고 있는 종합대학교의 한 해 신입생을 2500명으로 볼 때, 매년 3.8개의 대학이 사라져서 7년간 26.7개나 없어진 것과 같다. 그렇게 사라진 자리를 국내 대학에 유학 온 3만 600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로 채우긴 역부족이다.

그림 4 . 유학생 유입유출(좌) 과 유학경비 수지(우)
(교육통계서비스, 단위 : 명, 백만달러)



4. 대학교육의 개혁 없이 교육서비스 흑자는 불가능

2007년도 한국의 일반대학의 등록금 평균은 690만 원, 등록금이 비싸기로 유명한 이화여대의 인문사회계열 1년생의 등록금은 955만 원이었다. 서울로 유학 온 지방 학생들이 숙식과 기타 비용으로 월 80만 원(하루 식비 1만원씩 30만 원, 월세 30만 원, 용돈 및 교재비 20만 원)정도만 쓴다고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교육비는 1650만 원(690만 원 + 960만 원)에 달한다.

최근 유학생이 가장 많았던 2007년의 연평균 환율은 1달러에 930원 수준이었다. 당시 유학생 1인당 쓴 유학비용(약 2만 3056달러)은 우리 돈으로 2144만 원이다. 국내에서 대학 다니는 것보다 약 500만 원이 비싸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고 장학금도 많다는 영미 국가들과 서울의 높은 물가수준을 생각하면 비용 차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유학 가는 나라와 대학유형에 따라서 교육비가 더 저렴할 수도 있다. 환율의 변동 양상이나 국내 대학교육비의 인상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유학비용이 국내보다 저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만은 사실이다.

정부는 교육서비스의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외국대학 분교 유치,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는 외국인학교 설치, 외국교육기관인 송도국제학교 개교 등 다양한 개방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를 몇 개나 만들어야 증가하는 유

학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07년 교과부가 실시한 고등교육 국제화 현황조사(약 190여개)에 따르면, 정부가 OECD국가의 대학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근거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25명 미만을 충족한 대학은 30개교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교육기본시설확보율 100퍼센트를 채우지 못한 학교는 153개에 이르렀다. 교육재정의 등록금 의존율은 미국보다 국공립은 50퍼센트나 높았고, 사립도 40퍼센트가 높았다. 그럼에도 정규직 취업률이 70퍼센트 이상인 학교는 20개교 정도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대부분 소규모 대학들이었다. 늘 세계경쟁력을 떠들었지만 외국인 전임교원 수가 10명 미만인 학교가 130개에 달했다. 이러한 한국 고등교육 실태로는 고등교육 유학도 조기유학도 막을 수 없다.

교육당국자 중에는 여전히 외국대학분교 유치를 주장하는 데, 유능한 교수가 본교의 우수한 시스템과 동떨어진 분교에 근무하러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착각이다. 사실 교육의 질은 한 명의 역량에 의존하기 보다는 우수인력들의 상호소통과 협력을 통해 향상된다. 또 다른 나라들도 외국에 분교를 내는 것보다 유학생을 받는 게 자국의 경제에 더 긍정적이라는 셈 정도는 다 한다.

유럽공동체처럼 국가라는 장벽을 넘어 고등교육시스템을 공유하고, 미국처럼 개별 대학의 창의성과 경쟁력만을 우선시하거나, 저개발국가처럼 외국명문대학의 분교를 유치하는 등의 방식을 단순히 우리에게 이식할 순 없다. 우리의 시스템은 취약한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해 나가면서, 각개약진이 아니라 위기의식과 열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중후위 대학들의 협력체계를 만들고, 국가가 뒤를 받쳐서 대학구성원들의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새사연
saesayon.org